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가 젊은 세대의 미래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춘천의 경우 2023년 7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같은 해 말에는 20.4%였고, 불과 1년 뒤인 지난해 말에는 전체 인구 29만 848명 가운데 6만 1,370명이 65세 이상으로 집계돼 비율이 21.4%에 달했다. 단 1년 만에 고령인구 비율이 1%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전이 그만큼 가파르다는 의미다.

그러나 노인의 삶의 질은 존엄과는 거리가 멀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매년 증가하는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는 복지를 넘어 인권의 문제다.

요양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기저귀조차 제때 갈아주지 않아 방치되거나, 강압적으로 침대에 묶어두는 일이 벌어진다. 환자의 편의를 무시한 채 진통제나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적 모욕이나 반말, 무시는 흔한 일이다. 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존엄이 무너지고 있다.

가정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자녀가 부모의 연금이나 재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빼앗아 생계가 흔들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폭언과 무관심, 심지어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절반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가족을 고발할 수 없다”는 심리적 장벽은 피해를 더욱 깊게 만든다.

사회적 차별과 고립 역시 심각하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 현장에서 배제되거나,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디지털 전환 속도는 빠르는데,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조차 하지 못하는 노인도 많다. 이로 인해 고립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노인이 늘고 있으며,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

이제는 인식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기초연금과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고령 친화적 일자리 마련, 공공 돌봄 체계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춘천미래동행재단의 노인일자리 사업처럼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 아울러 노인을 사회의 주변부가 아닌,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주체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일은 곧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길이다.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는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담보한다. 오늘의 청년은 내일의 노인이다. 나이 들이 곧 소외와 빈곤을 뜻하지 않는 사회, 존엄한 노후가 당연해지는 사회야말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 국가의 모습이다.

@ 춘천미래동행재단 노후동행사업단 (2025. 9. 4.)